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10월

고객만족 경영성과 가시적으로 나타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각 분야 만족도 대부분 상승

연구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책고객과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를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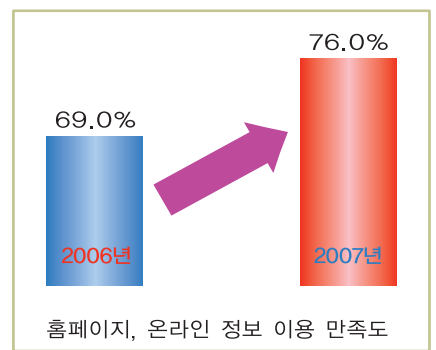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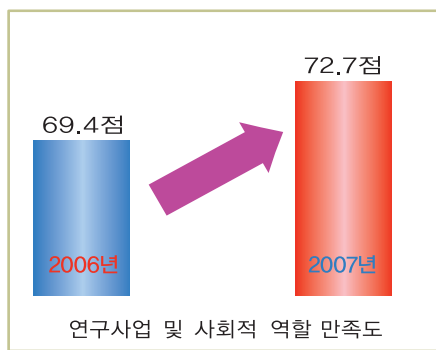
연구사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는 706명의 정책고객이 응답했다. 10가지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평균 72.7점으로 2006년 69.4점에 비해 3.3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에 대한 친절성과 서비스'는 전년 대비 5.1점이 상승한 77.4점으로, 만족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농정현안을 다루는 데 연구원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98.3%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고객만족 경영 실적을 위한 노력에 대해 93.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방문 또는 전화상 업무 처리 종합만족도가 88.0%로 2006년과 비교해 5.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포럼 운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노력' 등 부가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3년째 낮게 평가되어 온라인 포럼 운영 개선과 고객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경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홈페이지 회원들 745명이 응답한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6.0%로 2006년과 비교해 7.0%포인트 상승하였다. 올해 홈페이지 개편 후 만족도는 90.2%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 홈페이지의 강점으로 정보의 전문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유용성과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고객들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고객들은



현장중심연구와 농촌과 도시의 소통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 달라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620건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여 연구원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연

구원은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연구사업 및 경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전통식품, 바이오에너지 주제로 간담회



10월 25일 농촌진흥청과 전통식품, 바이오에너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은 농업경제와 농업기술개발 분야 간의 상호이해와 정보를 공유하여 농업·농촌사업의 방향을 정립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0월 25일 농촌진흥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정섭 원장과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등 기관장과 부서장,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통식품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우리 연구원 이계임 연구위원이 '전통식품의 시장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농촌진흥청 박홍주 과장이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어 바이오에너지 동향과 전망에 대

해 우리 연구원 박현태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이 '바이오에너지 개발 동향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농촌진흥청 방진기 단장이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 동향 및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양 기관은 세미나를 마친 뒤 관심사를 중심으로 토론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 개최



중국 북경에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5차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와 공동으로 중국 북경에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5차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분과로 나눠 열렸는데, 첫 분과는 농촌 금융과 보험을 주제로 우리 연구원 최정섭 원장이 주재했다. 우리 연구원 정호근 전문연구원은 '한국 농업 금융의 현재와 미래'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황의식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농촌노령화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분과는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친푸 소장이 진행했다. 우리 연구원 마상진 전문연구원은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관련 변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 송미령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세번째 분과는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고니시 고조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우리 연구원은 이상민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현황과 전망'이란 논문을 발표하고, 박현태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일본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가 농업정책 연구와 정보교류 및 학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공동으로 창설, 매년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한중일 3국 기관장 회의에서는 내년 일본에서 열릴 제6차 국제심포지엄을 6월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10월 16일 중국 농업에 관한 세계은행 프로젝트 최종연구결과 발표 회의에 참관했다. 10월 17일

에는 중국 농촌 시범 부락과 북경시 신파디 농산물도매시장을 견학했다.

연구기획자문단회의, 연구과제 발굴 논의

재경부, 농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농업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기획자문단회의를 10월 2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연구기획자문단회의에서는 2008년도 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과 농업·농촌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농업 인력 육성의 중요성, 농업의 지평 확대 측면에서 식품산업과의 연계 필요성,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

가와 쌀 관세화 등에 대비한 국제곡물시장 관련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방안 등 미래농업을 위한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논의했다.

농업관측정보센터, 1사촌 농가 일손 도와

농업관측정보센터는 10월 1일과 2일 1사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 고창군 대신면 덕천마을을 방문, 차 밭 제조작업 등 농가 일손을 도왔다. 밤에는 마을 주민들과 마을회관에서 농업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센터는 앞으로 덕천마을과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농가 일손을 돕는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0월에 KREI세미나 세차례 개최

연구원이 10월 24일 개최한 KREI세미나에서 미주리대학교 톰 존슨 교수가 '재생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경제성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10월 26일에는 농림부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을 초청, 중회의실에서 '한국 농업이 나아갈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10월 31일에는 미국 텍사스 에이앤엠주립대학교 존펜슨 석좌교수를 초청, '미국 옥수수과 에탄올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정 바로알기 프로그램 개설·운영



'농정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개강, 10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연구원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농정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개설, 10월 1일 개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강의하고, 30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농정분야인 쌀산업, 축산업, 농산물 유통, 농업정책방향, 식품산업 등

10개 강좌를 개설하여 원내의 전문가들이 강의하고 토론한다.

10월 1일 개강식에서 최정섭 원장이 강좌개설 취지를 밝히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최세균 선임연구위원과 임송수 연구위원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추진동향에 대해 강의했다. 첫 강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이번 강의가 농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이번 '농정 바로알기 프로그램' 개설을 계기로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학습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농업부문 과제

김 창 길 연구위원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1세기 이내에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1.8도에서 4도 가량 올라가고 이로 인해 해수면은 18~59cm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초래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 지구온난화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고 당면 과제로 다가왔다.

지구온난화, 세계 이슈로 부각

최근 들어 폭염과 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킬리만자로 정상에 빙하가 빠르게 줄어드는 등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평균보다 온도가 빨리 상승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30년경에는 아열대 기후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경에는 수도권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온난화가 진행되면 농산물 주산지의 북상이동, 병충해 및 재해 발생 증가 등으로 농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쪼소의 유지율과 고기소의 증체를 저하, 가축사료의 품질 저하, 초지 황폐화 등 축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범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시행령인 교토의정서가 1997년 체결됨으로써 국제적 대응체제가 마련된 바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되어 선진국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1차 공약기간(2008-2012)에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990년 대비 약 5%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였

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세계 10위이고,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의 OECD 회원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선진개도국으로 지칭되는 국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것이다.

온실가스 발생은 거의 모든 산업 활동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의무감축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90년 이후 매년 4.7%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은 같은 기간에 매년 0.7%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현실화 가능성 높아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산업생산 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오히려 의무감축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는 국가별로 할당된 감축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농업부문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은 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국제환경협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2012년 협상 이후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온난화 적응 부문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종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배방법 개선과 바

이오에너지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축산부문도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었다.

농업은 온실가스 관리의 효자산업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은 기술을 타부문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를 활용하는 방안과 저감기술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 이전에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하는 조기감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한다.

농경지의 토양은 관리방법에 따라 유기탄소를 고정해 온실가스를 저장·흡수할 수 있다. 이를 과학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농업부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소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압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정책수단과 농업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결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적절히 행해진다면 농업은 환경친화적이고 기후친화적인 산업으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관리에 효자산업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지구온난화는 아직 낯설고 먼 미래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관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농업부문이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과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R**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 방향

강혜정 전문연구원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21세기를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 여성(Female)이 주도하는 3F 시대라고 전망하였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는 여성농업인이 감성과 상상력을 불어넣어 생산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여성의 부드럽고 친근한 리더십은 지역사회 의 단합에 기여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고령화시대에 여성농업인은 부족한 농업 인력의 새로운 대안이다. 또한 새로운 소비 트렌트에 부응하는 경영자이며, 농촌 사회 활력을 증진시키는 리더이다.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증가와 한계

산업화에 따른 이농으로 농가의 가족 관계가 부자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이 증가하였다. 농업의 주종사 인구중 여성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06년 52%로, 지난 35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농사일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44%에 달할 정도로 농업의 중요한 노동력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아직까지 농업경영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논농사는 남편, 밭농사는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전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생산수단과 관련된 의사결정, 생산자조직 가입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여성명의로 된 농지가 전혀 없는 농가가 7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여성농업인의 생산 자원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여성 농업주종사자의 62%가 60세 이상으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3% 이하로 매우 낮다. 40세 이하 여성의 영농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자녀양육 등의 가사노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

할 젊은 여성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젊은 여성농업인의 신규 유입 단절은 농업·농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농업인 역할 커져

과거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가정주부, 농업 보조자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역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예, 축산, 낙농, 버섯 등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농산물 가공업, 관광농원 등의 농외소득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CEO가 등장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사회여건 변화로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통식품과 향토음식 제조 및 유통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농외소득활동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자아실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부녀회와 봉사활동 등의 지역사회활동도 활발하다. 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강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 농촌관광이나 지역개발에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최근에는 마을의 고령노인을 돌보는 데도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마을 이장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이장 6,579명중 6.6%인 435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농업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

업자이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과 사회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남성중심의 문화와 제도적 틀 안에는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 미약,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노동 부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부족 문제, 불안정한 노후보장, 마케팅 및 정보 활용 능력 부족, 리더쉽 부족 등이 주요 어려움과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역할 변화에 따라 정책방향도 변해야

농가인구 고령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등의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은 더 넓어지고, 역할과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핵심인력으로 부상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향후 농업 경쟁력과 농촌 발전은 크게 좌우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도 새롭게 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은 일과 가사의 양립,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의 전문능력 부족, 불안정한 노후생활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도우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등 각 활동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조성,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시스템 구축, 농업인 연금제도 확대 등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DDA 협상 동향과 핵심 논점

김 윤 식 부연구위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0월 초부터 농업부문에 대한 DDA 협상이 2주간 열렸고 10월 마지막 주에 협상이 속개되었다. 의장은 10월 말 협상 때까지 각국 또는 각 그룹의 의견을 듣고 11월 중순쯤 수정된 세부원칙을 발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관심분야는 국내보조와 TRQ

이번 협상은 지난 7월에 팔코너 의장이 농업분야 세부원칙 초안을 발표한 이후 열려 각국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초안이 발표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분야도 많아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번 협상은 의장이 수정된 세부원칙을 발표하기 앞서 각국 또는 각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이번 협상이 의장의 초안을 검증하는 장이라고 여겼다.

각국 혹은 각 그룹은 11월 중순 의장의 수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그룹별로 수시로 회의를 가지면서 공동 입장을 정리하여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입국 모임인 G-10과 개도국 모임인 G-33 그룹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문건이 의장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당초에는 이번 협상에서 농업분야 핵심 사안이 모두 다루어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안별로 각국의 이해가 달라 이번 협상에서는 수출 경쟁, 특별품목, 특별품목 지정에 따른 TRQ(관세할당물량) 확대 방법 등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은 10월 말 재개될 협상에서 논의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TRQ이다. 국내보조와

관련해서는 직불제에 관한 예외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조건이 분명치 않아 각국의 관심이 쏠렸다. 직불제에 따른 보조는 일반적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지급 기준이 되는 토지가 고정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기준 면적도 갱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갱신기간이 짧으면 생산과 연계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의장 초안은 기준을 갱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갱신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특히, 상당 기간이 몇 년인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5~7년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

개도국 지위 인정 받는 것 중요

EU는 갱신의 개념에 대해 단순한 수혜 조건의 농가 간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동조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조의 기준이 되는 전체 면적이 정해진 상태에서 단순히 수혜 자격만 이전하는 것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U의 주장이 과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협상단의 또다른 관심사항은 TRQ 관리 방안이다. 수입국들은 자국내 여건 때문에 TRQ 물량 전체를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DDA 협상에서 수출국들은 TRQ 물량 가운데 수입되지 않은 물량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TRQ 물량을 배정하면서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기도 한다. TRQ 관리를 생산자 단체에 맡기거나 수입 시 국내산 농산물을 일정량 이상 구매해야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협상 대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 부문의 추가감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DDA협상에 대한 국내 관심 적어

팔코너 의장의 초안이 11월 중순경에 나올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네바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따라서 의장의 발언이나 주요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DDA 협상이 올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비농업부문(NAMA)에서의 협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는 내년 정도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 UR 협상이 8년 이상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농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파악하여 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DDA 협상에 관한 국내의 관심이 UR 때보다 훨씬 덜하다는 느낌이다. 아마도 한·미 FTA나 한·EU FTA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DDA 협상은 FTA 못지않게 중요하다. DDA 협상에서는 감축대상 보조의 감축 규모와 일정, 허용대상 보조에 대한 새로운 규정, TRQ 관리, 민감품목 혹은 특별품목의 지정 및 그에 따른 TRQ 물량 배정 등 우리나라 농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DDA 협상 동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

FAO, 식량주권 확립 강조

김태곤 연구위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창립기념일인 10월 16일을 '세계 식량의 날'로 정하여 매년 세계 각국을 향하여 글로벌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지난해의 '농업투자과 식량안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식량권'이 과제로 선정되었다.

식량권이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충분한 양과 영양을 갖추고 문화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식량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식량권이 자선에서 권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소위 '식량주권'의 개념에 근접하고 있다.

식량을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식량주권을 인식하는 것은,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준수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식량을 둘러싼 연료용과 식용간의 쟁탈전 가열

식량주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지구상에 8억 명이 넘는 기아 인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 등이 배경에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에 의하여 식량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의 식용 수요증대와 선진국의 연료용 수요증대가 경합하는 등 식량을 둘러싼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FAO는 1996년 식량정상회의에서 기아인구를 1990~92년 8억 2,300만 명에서 2015년 4억 1,200만 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기아인구는 1996~98년 8억 2,6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01~03년은 8억 2,00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예상 수치는 5억 8,200만 명으로 목표보다 1억 7,0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식량의 날 FAO 사무국장 자크 디우프(Jacques Diouf)는 기념연설을 통해 식량주권은 단순히 기아인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가, 또 가족을 위해 충분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 동시에 식량의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제약하거나 파괴하는 요인들로부터 농업공동체를 보호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농업은 기후와 풍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선진국의 기술이 개도국으로 이전되기 어려우며,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개도국은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농업투자도 부족하다. 여기에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선진국은 농산물 수출국, 개도국은 수입국으로 세계가 양

극화되는 무역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FAO는 지속적으로 식량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세계를 향해 보내고 있다. 2006년 10월 세계식량의 날 테마를 '농업투자과 식량안보'로 결정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식량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확대가 농업생산을 회복시킨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2007년 4월 '농산물시장백서'에서 무역자유화가 시장접근문제, 빈곤해소, 식량안보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DDA 협상의 성공은 세계 기아문제에 대한 공헌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7년 6월 '식량수급전망'에서 바이오연료용 수요증가 등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을 요인으로 2007년도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0년 대비 20% 증가하는 반면에, 최빈개도국은 90%나 증가하고 해상운임도 폭등하는 등 수입국에게는 경제성장의 약재로 작용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2007년 7월 FA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농업전망 2007~16'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게 형성되고 이것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식량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출국이나 수입국을 불문하고, 또한 어느 시기이든 국민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다. 수출국이 식량 부족시에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리를 가지는 만큼, 수입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일정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는 주권을 가져야 한다. 시장개방에 의한 무역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권리는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식량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DDA 협상도 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에서 자급률을 향상하여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근거와 수단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데는 일정 수준의 국내생산을 통한 자급률 향상, 비축제도 구축,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 등이 중요한 수단이다. 또 국내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권리 보호, 농지 및 수자원 확보, 종자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소비자의 식량에 대한 안전의식 고양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시장개방의 확대와 함께 개도국은 선진국의 식량시장으로 고착되는 종속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로서 식량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R**

10월 농정 주요 동향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의 영향

세계 곡물 가격 폭등에 대한 대·내외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실제로 그 영향이 식품가격 상승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옥수수 가격이 한 달 동안 20%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적인 요인도 있으나 중국, 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 원유가 상승에 따른 곡물 생산 비용 증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증가와 같은 지속적인 구조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6년 35% 수준이던 세계 곡물 재고율은 내년에는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급속한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농산물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1970년대 이후 30여년 만에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은 식량자급률이 25%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축산물 무역 적자 규모는 54억 3,52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 폭이 29.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농축산물 무역 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곡물 가격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밀과 같은 식품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이미 밀가루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고 라면, 빵 등의 식품 가격 또한 오를 전망이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파급 영향으로 그동안 지적되었던 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한우의 사료 가격을 올려 쇠고기 도매가격을 높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쇠고기 소비자 가격도 높이게 된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 서민들의 가계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국가 경제를 압박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은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러시아는 국민들의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식품 가격의 상한선을 제시했다. 중국은 도시 저소득층과 학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집트, 요르단 등은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식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농업보조금을 확대하여 곡물생산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보리, 밀 등의 수출통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곡물에 대한 생산량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식량 수입을 확대해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식량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EU FTA 제3·4차 협상 동향과 쟁점

7월에 열린 한·EU FTA 제2차 협상 이후 두 차례 협상이 더 진행되었으나 큰 진전이 없어 연내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3차 협상(9.17.~9.21.)과 제4차 협상(10.15.~10.19.)에서도 이견을 충분히 좁히지 못해 향후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상품 양허 수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부문별로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농산물 등이 주요 논쟁 사안이었다. EU는 교역액 기준으로 80%에 해당하는 상품 관세를 3년 내에 조기 철폐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 양허안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교역액 기준 68%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한·미 FTA의 양허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EU는 한·미 FTA와 비교할 때 농산물 양허 수준이 낮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에 대한 교역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과 농업 부문의 민감성 등을 들어 반론을 펼쳤다.

농산물 보호 장치와 지리적 표시제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도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와 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농업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한 반면, EU는 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일반 세이프가드를 제안하였다. 또한 EU가 제3차 협상에서 포도주, 위스키 등 주류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리적 표시제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 보호되는 품목이 있지만 그 수가 2007년 10월 현재 38개에 그쳐 피해가 월등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동물복지를 포함한 위생 및 검역조치 분야 협상은 통합협정문 작성이 이루어지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11월 개최될 예정인 제5차 협상에서 양허 수준, 농산물 개방 폭, 지리적 표시제 등에 관한 논의의 진전 여부가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연구결과세미나 계획대로 끝내고 연구 마무리



올해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결과세미나를 가졌다.

지난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올해 끝나는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세미나를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매년 농업부문에 유용한 과제선정과 수행을 위해 연구기획자문단과 농촌연구자문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가 2월 초부터 설계세미나를 시작했다. 그리고 5월에 부서별로 중간검토회의를 갖고 10월 8일부터 결과세미나를 가졌다.

올해도 연구자들은 더욱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월에 이루어진 연구결과세미나 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 방안
- △남북한 농업협력 방식의 전환-개발 협력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 변화와 전망
-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 △농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
- △농촌 정기 시장의 구조와 기능 변천 연구
- △향토음식산업의 육성 방안
-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
-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 과제
- △EU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
- △선진국형 농정으로서 전환을 위한 연구
-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
-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전략-동아시아 FTA 대비

- 농업부문 연구
- △농업부문 전망 모형 구축 연구
-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방안 연구
- △농업인의 노후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선임연구위원에 이규천 박사 임명



연구원은 10월 1일자로 이규천 박사를 선임연구위원에 임명했다. 이규천 선임연구위원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규천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농정, 직불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림기술센터 기획평가실장을 거쳐 2005년 10월 13일부터 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10월 1일자로 2년 임기의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연구진 동정

△김정호 부원장과 강혜정 전문연구원은 10월 19일 일본 지역농림경제학회가 가나자와시 문화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쌀소득직불제가 생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및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10월 9일 농업과학기술원이 aT센터에서 개최한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워크숍에서 '양분총량제 개발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문호 연구위원은 10월 12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일 국제 차 심포지엄에서 '한국차 유통 현황 및 발전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10월 16일 제주도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감귤생산농가 워크숍에서 '국내과실 소비성향 및 제주농업의 대응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10월 15일 광주에서 '아시아의 쌀,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연구원 인사

△(승진) 선임연구위원: 이규천, 부연구위원: 마상진 (보직) 농업관측정보센터장: 박동규 선임연구위원

확대기조위, 2008년 기본과제 심의 및 발굴 논의



2008년 기본과제 심의 및 발굴을 위한 확대기조위를 10월 24일 개최했다.

연구원은 10월 24일 중회의실에서 2008년도 기본연구과제 심의 및 발굴을 위한 확대기획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확대기획조정위원회에는 정부기관, 학

계, 언론계 및 유관 연구기관 관계자와 우리 연구원의 기획조정위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김정호 부원장의 사회로 열려, 최지현 기획조정실장이 금년 3월부터 발굴해 온 2008년도 기본연구사업(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개별 연구사업에 대해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변화, 우리 연구원의 위상과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수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심의했다. 또한 추가로 추진할 연구사업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